

마을공동체사업에 주민자원 활용 촉진하려면 사업성과 인정 등 단계적 개선방안 도입해야

마을공동체사업 자립성 논란 해결하려면 주민자원 활용실태 파악해야

주민들이 제안한 공동체 활동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하 마을공동체사업)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 참여자 수가 22.9만 명에 이르는 대표적인 마을공동체 지원책이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보조금 지원이 주민들의 자립성을 약화한다는 주장과 주민들이 사업에 투입한 유무형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주장이 대립해왔고, 이는 2018년에 시작된 2기 마을공동체 정책의 주요 쟁점이 되었다.

주민들이 대가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에 투입한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주민자원으로 정의한다면, 이러한 주민자원의 발굴과 활용은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립성 논란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의 주민자원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적절한 인정 기준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정책관계자 70% 이상 “주민자원 중요…활용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참여자, 담당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상근자 및 활동가, 전문가 등 정책 관계자들은 주민자원에 대한 긍정적인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주민자원은 중요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와 활용을 목적으로 경제적 가치환산에도 동의한다는 의견이 70%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일부 쟁점에서는 마을공동체 활동의 순수성 훼손, 가치환산 기준 설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공무원과 전문가 집단의 부정적인 응답률이 높기도 했다. 따라서 서울

시 마을공동체사업에서 인정 가능한 주민자원 유형과 가치환산 기준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폭넓은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표 1] 서울시 정책 관계자들의 주민자원에 관한 기본인식

(응답자: 총 97명 / 단위: %)

문항	동의	동의하지 않음	잘 모르겠다/ 기타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주민자원은 중요하다	87.6	7.2	5.2
주민자원 활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필요하다	85.6	11.3	3.1
주민자원의 평가와 활용을 위한 경제적 가치환산이 필요하다	71.1	23.7	5.2

주민자원, 회의 등 14개 세분류로 나누고 유형별 가치환산금액 도출

국내외 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에서 인정 가능한 주민자원의 유형은 크게 자원활동, 재능, 현물, 현금으로 구분했다. 자원활동은 마을공동체사업에 따른 의무활동, 회의, 홍보, 실무, 행정업무, 공간운영을 말한다. 재능은 마을공동체사업에 필요한 강의, 컨설팅, 기술(디자인, 공연, 제작) 등 전문적인 서비스 기부를 말한다. 현물은 마을공동체사업에 기부 또는 무상 대여한 공간, 차량, 물품, 식음료를 말한다. 현금은 자부담 사업비 외에 주민들이 모금, 기부, 각출한 현금을 말한다. 정책 관계자들은 이러한 주민자원의 4개 대분류와 14개 세분류에 대해 69.1%(식음료)부터 98.2%(전문가의 강의)까지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주민자원의 가치평가를 위한 환산기준은 국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주민자원과 유사한 시중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또는 그 이하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주민자원 세분류별로 시중가격과 시중가격 이하 예시금액, 주민자원 실태조사 결과에 두 가지 예시금액을 모의 적용한 환산액과 보조금 액수 등의 참고 정보를 정책 관계자들에게 제공하고 적정 환산금액을 질문해 평균값을 구했다.

그 결과, 자원활동은 시간당 6,638원, 재능 중 강의(전문가)는 시간당 99,167원, 현물 중 차량(승용차)은 시간당 7,347원 등이 적정한 가치환산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원 세분류별로 적정 환산금액은 시중가격 대비 42.7%에서 145.2%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주민자원의 과대 혹은 과소평가를 우려해 높은 가격은 낮추고 낮은 가격은 높이는 조정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표 2]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에서 인정 가능한 주민자원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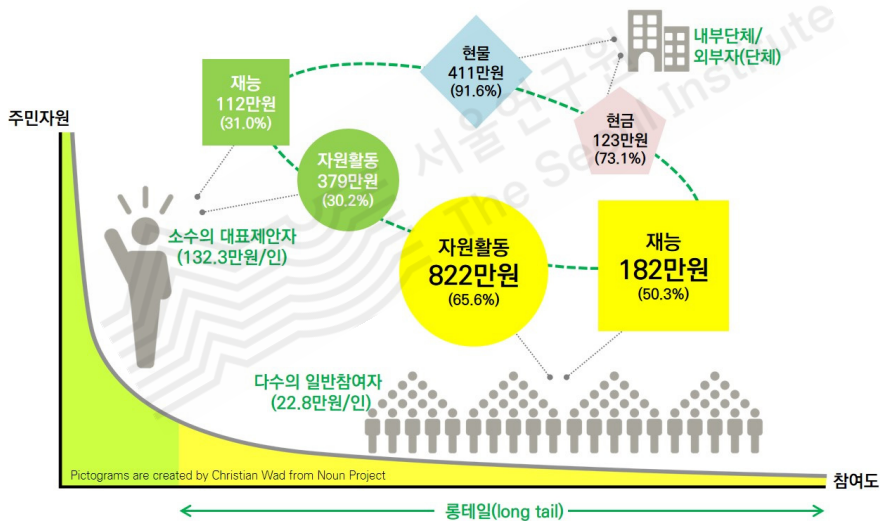
구분		측정 단위	내용
자원 활동	마을강좌 (의무활동)	시간	마을공동체 사업에 따른 의무 교육 및 프로그램에 참석한 활동
	회의		기획회의, 워크숍, 실무회의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각종 회의에 참석한 활동
	홍보		SNS, 전화, 포스터, 현수막 등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작업에 참여한 활동
	실무		축제 준비, 벽화그리기, 장보기, 차량 운전, 유아 돌봄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해 수행한 다양한 업무
	행정업무		회의록 작성, 회계처리, 결과보고서 작성 등 사업절차상 수행한 업무
	공간운영		공동체공간 운영관리에 자원봉사로 참여한 시간(유급운영자 제외, 단 유급시간 외 추가로 참여한 시간은 포함)
재능	강의	시간	교육, 사례발표, 실무강습 등의 활동
	컨설팅		법률자문, 갈등조정, 회계 컨설팅, 디자인 자문 등
	기술	횃수	퍼실리테이팅, 촬영, 디자인, 연주, 수리, 제작 등
현물	공간	시간	회의, 교육, 행사 등에 무료로 이용한 실내외 공간
	차량		물품구입, 물품운반 등을 목적으로 사용한 개인 소유 차량
	물품(대여)	개수	주방도구, 공구 등 마을공동체 활동에 무료로 대여한 물품
	물품(기부)		식재료, 옷, 책, 전자제품 등 주민들이 기부한 물품
	식음료	횃수	회의, 교육, 행사 등에 제공된 식음료
현금	원	자부담 금액을 제외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지출된 현금	

주민자원 가치환산 총액은 사업당 평균 2,434만원으로 ‘보조금의 2.1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서 마을공동체사업에 실제로 투입된 주민자원의 가치를 분석한 결과는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일조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강북구에서 진행된 마을공동체사업 44건을 시범 조사한 결과, 투입된 주민자원

은 총 2,357건이었다. 여기에 가치환산 기준을 적용하면, 사업당 평균 자원활동 1,253만 원(56.2%), 현물 449만 원(20.1%), 재능 361만 원(16.2%), 현금 168만 원(7.5%) 순이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주민들의 소통(회의, 홍보)과 노동(실무, 행정업무)이 주민자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제공자별로는 일반참여자 1,048만 원(47.0%), 대표제안자 529만 원(23.7%), 이들이 속한 내부단체 414만 원(18.5%), 외부 단체와 개인 240만 원(10.8%) 순이었다. 전체로는 일반참여자가 대표제안자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주민자원을 제공했지만, 1인당 평균은 대표제안자(132.3만 원)가 일반참여자(22.8만 원)보다 6배 가까이 많았다. 또한 대표제안자와 일반참여자는 개인이 보유한 자원활동(95.8%)과 재능(81.3%)을 주로 제공하고, 내외부 단체들은 이들 개인이 제공하기 힘든 현물(91.6%)과 현금(73.1%)을 보조하고 있었다. 대표제안자의 헌신, 일반참여자의 집단적 기여, 내외부 단체의 보조 등 롱테일(long tail) 현상과 상호부조에 기반한 주민자원 조달 구조가 확인된 것이다.



[그림 1] 롱테일 현상과 상호부조에 기반한 주민자원 조달 구조

무엇보다 마을공동체사업에는 보조금보다 더 많은 주민자원이 투입되었다. 사업당 평균 주민자원 가치환산 총액은 2,434만 원으로 보조금인 1,139만 원의 2.14배에 달했다. 현행 규정인 현금 자부담을 제외해도 1.96배, 비현금 자원만으로도 1.81배 많았다. 따라서 그동안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에서 현금 자부담률만을 근거로 주민들의

보조금 의존도가 높고 자립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던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지원 방식에서도 보조금 액수를 넘어서는 주민자원이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한 만큼, 이러한 주민자원이 합당하게 인정받고 더욱 활발하게 활용되어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주민자원 활용 촉진방안은 주민 자부담으로 인정 등 단계적 도입 제안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에서 주민자원 활용을 촉진하려면 사익 추구하고 같은 부작용은 예방하되 실효성 있는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자원을 제공한 개인이 아닌 단체에게, 현금보다는 마을공동체 활동에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비현금 형태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촉진방안은 보상 수준에 따라 사업성과로 인정, 주민 자부담으로 인정, 후속 사업 인센티브 제공, 보조금 차등 지원, 후속 마을공동체 활동에 쓸 수 있는 마일리지나 지역화폐 제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울시 정책 관계자들은 단기적으로는 지원책 마련이 비교적 수월한 ‘사업성과로 인정’(21.8%)과 ‘주민 자부담으로 인정’(32.7%)을, 중장기적으로는 정책 수단 개발과 시범 운영이 필요한 ‘마일리지나 지역화폐 제공’(34.2%)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